

제 1 교시

국어 영역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 계약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사적 자치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상대방,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등장한 플랫폼 노동 계약과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은 이러한 전제와 원칙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플랫폼 노동 계약은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플랫폼 작업자 등 신종 노동시장에서 등장한 계약 형태로, 전통적 근로계약(종속적 노동)과 도급계약(독립적 업무 위탁)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종속성을 나타내는 혼합적 지위에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관계가 명확했던 전통적 계약과 달리, 플랫폼 노동에서는 복수의 주체가 관여하며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한편, AI 기반 계약은 AI가 계약 당사자 또는 일부 기능을 대행하는 형태로, 계약법상 의사표시 요건과 책임 배분 원칙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전통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 계약 능력 등 인간 주체의 자유의사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AI 계약에서는 AI의 주체성 인정 여부와 자동 이행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확정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는 전통적 채무불이행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다.

디지털 계약 환경에서는 플랫폼이나 AI 시스템이 자동 의사 결정·거래 조건을 주도함에 따라 정보 비대칭, 알고리즘 차별,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빈발한다. 이는 알고리즘 운용의 불투명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보 독점 등과 연결되어 계약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라도 그것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통적 원칙의 확장된 적용을 요구한다.

현재 각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종속적 자영인 개념 도입,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집단적 권리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유사 책임을 부과하거나 AI 시스템에 제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나아가, 디지털 계약의 복잡한 당사자 관계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책임 분배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디지털 환경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정보 격차,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고려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 당사자 간 실질적 대등성을 회복하고, 디지털 계약 생태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계약법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자유 원칙보다 상위 개념으로 간주된다.
- ② 디지털 계약에서는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용이하다.
- ③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다.
- ④ 사적 자치의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국의 입장이다.
- ⑤ AI 계약에서는 자동 이행 과정의 오류로 인한 책임 귀속 문제가 전통적 계약법 원리로 해결하기 어렵다.

2. 윗글을 바탕으로 AI 기반 계약의 특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I 기반 계약에서는 의사표시의 주체와 책임 귀속의 문제가 전통적 계약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 ② AI가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③ AI 계약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AI에 제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④ AI 계약에서는 인간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계약 능력이 더 이상 법적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 ⑤ 전통적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 법리는 AI 계약의 복잡한 책임 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는 음식 배달 플랫폼 P사의 라이더로, P사가 제공한 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A는 업무 시간과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P사가 정한 복장 규정과, 평점 시스템, 배달 경로 알고리즘을 따라야 한다. 배달 중 사고로 A가 부상을 입었으나, P사는 A가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 B가 주문한 음식이 배달 과정에서 훼손되었을 때, P사는 자사는 단순 중개 플랫폼일 뿐 배달 서비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① A가 업무 시간과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P사는 A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 ② P사가 A에게 복장 규정과 평점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점은 A의 독립적 업무 수행 지위를 강화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③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문제는 전통적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의 과실 없는 물건 멸실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P사가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 경로를 지정한다는 점은 A에 대한 P사의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⑤ B의 훼손된 음식에 대한 P사의 책임 문제는 전통적 계약법상 특정물 채권의 보관 의무 법리로 명확히 해결될 수 있다.

4. <보기>는 디지털 계약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C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그의 검색 및 방문 기록을 분석한 AI 알고리즘이 다른 구매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나) D는 프리랜서 작업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작업했으나, 플랫폼의 일방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 수입이 감소했다.

(다) E는 AI 자산관리 서비스와 계약했으나, AI의 자동 투자 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손실을 입었고, 서비스 제공자는 AI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 ① (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C에게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개인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②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D에게 플랫폼 외부에서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 ③ (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E에게 AI 서비스 이용 전 투자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조언한다.
- ④ (가)~(다)의 문제는 전통적 계약법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에 맡긴다.
- ⑤ (가)~(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평가 시스템 공정성 확보, AI 시스템 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의 사실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AI 계약에서는 AI의 주체성 인정 여부와 자동 이행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개발자·운영자·사용자·AI 자체)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확정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는 전통적 채무불이행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⑤가 정답입니다.

① 지문에서는 사적 자치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고 했을 뿐,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지문에서는 오히려 "복수의 주체가 관여하며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했습니다. ③ 지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종속성을 나타내는 혼합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④ 지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계약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디지털 환경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정보 격차,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고려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 자치 원칙의 수정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2.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지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종속성을 나타내는 혼합적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기>에서 P사가 A에게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평점 시스템을 운영하며, 배달 경로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방식을 지정한다는 점은 P사가 A에 대해 일정한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가 정답입니다.

① A가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P사의 다른 통제 요소들을 고려하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P사가 사용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복장 규정과 평점 시스템은 오히려 P사가 A의 업무 수행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A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문제는 노동법적 쟁점으로, 단순한 채권관계의 물건 멸실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⑤ P사가 단순 중개 플랫폼인지 서비스 제공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특정물 채권의 보관 의무 법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3.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AI 기반 계약의 특성에 대한 추론적 이해를 측정합니다. 지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전통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 계약 능력 등 인간 주체의 자유의사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서술하며, AI 계약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하지만, 인간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계약 능력이 더 이상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AI와 인간 사이의 책임 배분, 인간 당사자의 법적 지위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추론입니다.

4.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은 디지털 계약 환경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지문의 마지막 두 단락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해 '종속적 자영인' 개념 도입,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집단적 권리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유사 책임'을 부과하거나 AI 시스템에 '제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정보 격차,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고려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평가 시스템 공정성 확보, AI 시스템 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 ⑤가 가장 적절한 방안입니다. ①, ②, ③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는 디지털 환경에서 불균형한 힘의 관계로 인해 단순히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문의 취지에 반합니다.